

위험사회에 만연된 심리적 행태, 타자의 논리를 경계하며



심재현 | 연구1팀장, 국립방재연구소, shim1001@mogaha.go.kr

1. 시작하면서

울리히 벡(Ulrich Beck)의 주장과 같이 근대사회는 자연을 인간의 통제 하에 복속시키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전쟁과 핵문제 등 체계적인 위험요인과 심지어는 기상이변에 의한 자연재해의 심화에 이르는 각종 안전의 문제들을 간과하면서까지 부의 축척과 편리함을 위한 작업들이 계속되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근대사회를 그는 위험사회(Risk Society)로 정의한 바 있으며, 이러한 개념을 통해 근대화의 그늘 속에는 문명의 자기파괴적인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어 인간적인 존재를 위협하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명의 형태들을 종말로 향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위험사회는 대중들에게 항상 위험을 경고하지 않으며, 더 정확하게는 대중들은 이러한 위험속에서도 자신만은 안전할 것으로 믿으며, 이러한 현상은 위험의 악영향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위험사회에서 계속되는 대형 재해와 재난을 겪는 우리 사회 뿐만 아니라 서구사회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시기와 사람들간의 정도 차이는 있지만 계속되는 것일까? 이에 대한 하나의 개념적 논리로서 본 고에서는 영국 College London의 심리학과 교수인 엘렌 조

페(Hlne Joffe)의 심리학적 이론인 자신이 아닌 타자(他者)의 논리(theory of the other)를 설명하고자 한다.

헬렌 조페는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 양성 반응자들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대중들은 상존하는 위험에 대해서도 스스로는 자신은 위험과 무관하다고 믿으며, 그 위험을 야기한 것은 다른 외부의 존재라 여기는 독특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논리는 AIDS가 대중에게 인지되고 유포되는 방식은 특정한 표상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서양에서는 AIDS는 “게이 돌림병” 또는 “아프리카의 질병”과 관련된 표상을 형성하며 대중에게 전달되었으며, 이를 통해 대중은 이 병이 문제있는 외부집단 혹은 타자에 의해 야기된다는 관념을 형성하게 되었다는데 착안된 것이다. 좀 더 큰 범위에서 서구의 정체성을 살펴봐도 서구 이외의 사회라는 관념과 대비되는 속에서 만들어져 왔다는 주장이나, 어떤 학자들의 서양적 정체성이 동양에 대한 특정한 시선을 통해 구성되었음을 오리엔탈리즘을 통해 밝히는 논리에도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마디로 정의하면 타자의 논리는 문제 있고, 사악한 외부집단과 위험을 결합시키는 것이 자신은 그 위험에 책임이 없으며 따라서 자신은 위험자체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자아의 안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메카니즘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개념이다.

그러나 이러한 심리적인 경향은 실제 위험 앞에서 스스로를 지키기보다는 오히려 무력하게 만드는 태도로서, 심리학적으로는 단지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적절하게 이론화하지 못하는 차원을 넘어 실제 위험을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현실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헬렌 조페는 경고하고 있다.

2. 타자논리가 만연된 사회적 속성의 사례

수해에 국한하더라도 타자의 논리에 대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이를 우리 사회의 구성원을 크게 피해당사자, 일반대중, 매스미디어, 전문가와 행정가, 정치가 등에 의한 조직화된 무책임성이라는 개념으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피해당사자의 경우에도 살펴보면 1998년 지리산 호우에서 경험한 바 있듯이 야영이나 취사가 금지된 지역에서 이를 어긴 결과 참변을 당했던 사례, 대피권유에도 이를 무시하다가 실종된 사례 등과 같이 피해이전에 자신만은 안전할 것이라고 믿다가 사고를 당하는 타자 논리가 적용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피해당사자가 아닌 일반 대중들의 매스미디어를 통해 피해의 참상을 간접적으로 인지하면서 피해당사자를 측은히 여김과 동시에 피해당사자와 자신을 동일시 하지 않고 타자로서 인지하는 경향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심리 때문에 자기 지역의 위험성을 스스로 체크하고 자주적인 보수, 보강을 하려는 노력이나 공공기관에 대해 이에 대한 시정요구 하려는 자조(自助)적인 측면보다는 수재의연금을 납부하는 정도에서 본인들의 할 일은 끝났다고 믿는 경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만연하게 된 데에는 특히 매스미디어의 역할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매스미디어 등을 살펴보면 반드시 재해와 관련된 전문가가 언론계통에서 일을 하면서 지속적

로 지역의 위험도를 인지시키고 이에 대한 공공영역에서의 대안과 개선을 유도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의 경우 이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선 수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언론에서는 지난 해 수해복구공사가 아직도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행정전반 아니면 일부 담당자의 문제로서 이를 고발하는 형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기사와 보도는 지속적인 항구복구공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남과 동시에 수해복구 담당공무원들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주는 형태로, 즉, 결코 수해복구공사를 도와주지 않는 형태로 현상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수해발생 직후에는 상황이 급변하여 수해피해현장의 참상을 적나라하게 보이는 것과 동시에 수해이전의 보도 초점과는 달리 지역 공무원의 업무태만이나 정부의 근원적인 대책 미흡으로 그 원인을 둘러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을 띄고 있다. 그리고 수해발생이후 며칠간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며 근원적인 대책을 요구하다가 정황이 1~2 주일 만에 보도에서 사라지는 습관을 해마다 발생하는 수해처럼 반복하고 있으며, 결코 변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단지 본인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다.

매스미디어의 책임은 현장고발의 형태도 중요하겠지만 사회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개선되지 못할 때 이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일반 대중에게 인지시켜 국가행정과 정책에서 이들이 반영될 수 있는 여론형성에 있다고 생각할 때 수해 뿐만 아니라 국가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매스미디어의 역할은 개선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전문가 역시 자기성찰에 충실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막스 베버의 정의에 의하면 지식을 가진 전문가는 그들의 전문성을 통해 어떠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그로 인해 문화공동체의 리더십을 획득한 사람들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전문가는 시민사회의 가치를 정립하는 이론사적인 역할과 동시에 시민사회의 여론을 이끄는 주도자 역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자, 정부정책의 문제를

지적하는 비판자이자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제안자의 역할을 가지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수해관련 전문가들이 전문성의 극대화 뿐만 아니라 전문성의 사회적 봉사과 사회적 책무라는 차원에서 정치적 역량을 가지고 반복되는 수해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현실로 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행정가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변화에 적응한 정책의 도입과 실천 등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959년 우리나라와 일본은 사라호 태풍과 이세만 태풍이라는 역대 최대의 태풍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면서 각각 풍수해대책법과 재해대책기본법이라는 법을 제정하였지만 근본적 패러다임이 상이했기 때문에 이후 완전히 다른 치수정책으로 고착되는 원인을 제공하였던 사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경우 당시 “보리고개”로 대변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자연재해는 삶의 의욕마저 잃게 될 수 있다는 우려에 국가가 직접적으로 무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해구호의 원칙을 설정하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상황은 40여년이 지나 경제적인 상황인 바뀐 현재에도 통용이 되고 있으며, 이제는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보상과 배상이라는 용어까지 사용하면서 국가 지원범위를 확대하라는 요구가 일상화되고 있다. 국민이 자주적으로 일선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스스로를 방어하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찾아보기 어렵고 사후의 보상에 관심을 가지게 한 원인 중의 하나를 국가가 제공한 셈이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국익보다는 본인이 속한 당의 이익에, 당의 이익보다는 본인들의 재선에 관심이 큰 정치적 행태는 자연재해에 국한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전세계적으로 국가의 무상지원범위가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특별재해지역을 선포, 자주방재보다는 무상지원범위를 더욱 늘리게 한 후진국형으로 퇴보시킨 장본인들이 정치인이었다는 것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례를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신설 안전관리조직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3월부터 행정자치부에서는 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이라는 안전관리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행정조직을 구성하여 적절한 신설기구의 기능과 조직에 대한 합의안을 5월까지 마련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에서는 학계와 사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정책자문기구를 조직, 합리적 조직 기능과 구성안에 합의하게 되었는데, 행정관료조직과 전문가 집단 모두가 타당하다고 인지하여 합의된 조직안이 무시되고 안전관리의 4가지 기능(예방, 대비, 대응, 복구)중 대응부분만이 강조된 조직이 당정협의를 최종안으로 확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국회에 최종적으로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청장이 특정직으로 되어야 한다는 조직법이 의원입법으로 별도로 추진되는 등의 문제가 별도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과 관료 집단의 수많은 격론과 설득, 합의로 이루어진 합리적 대안이 단 한번의 정치적 의견합의로 무시되고, 많은 행정 전문인력들이 수개월동안 검토, 제시한 대안이 비전문가 한 마디로 무시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3. 타자논리를 배제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하여

위의 사례처럼 우리가 사는 위험사회는 타자의 논리를 배경으로 한 조직화된 무책임성으로 인해 위험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전문적인 토론과 대중적인 의제사이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인 개념에서 위험이 인식되면 사회가 개선되고 변화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위험을 철저히 인지하고 남이 아닌 자기의 문제로, 논의만으로 그칠 일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서 인식하고 실천하는 자기비판적이고 반성적인 사회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까지 대국민 캠페인은 개인의 행위나 일부 국한된 그룹의 문제로서 한정하는 방식에서 국민 모두가 사회전반에 만연되어있는 재해위험도를 인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즉, 국민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재해에 대한 위험성을 깨닫고 스스로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공영역을 중심으로 위험과 관련하여 심화된 불균형을 균형 있게 만드는 작업, 그리고 위험이라는 중요한 사회 영역에 대한 새로운 개선방안을 개발하여 사회를 움직이는 동인(動因)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전문가와 행정가의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위험과 관련한 사전예방위주의 새로운 방재정책과 제도의 수립과 추진, 의식전환을 위한 시민운동의 활성화 등이 추진하여야 할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4. 마치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경제성장이라는 단일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자연을 인간위주로 이용하는 산업화, 도시

화라는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는 지구상에서 인간의 지위를 새로운 자연개념에서 다시 생각하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생태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통해 사회운영시스템의 성찰과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수해와 관련된 재해대책과 연계하면 본 고에서 논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회 전반에 만연된 타자의 논리를 경계함과 동시에 위험을 자신의 문제로 동일시하는 심리적인 형태로의 패러다임을 우선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21세기는 세계화라는 메가트렌드속에서 20세기 사회패러다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개혁이 요구되는 시대이며, 위험사회에서 타자의 논리만으로 우리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사회를 유토피아 또는 디스토피아로 구성할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 정해야 하는 새로운 오디세이를 준비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헬렌 조페, 박종연, 박해광 옮김, 위험사회와 타자논리, pp. 6~26, 한울아카데미, 2002.
아르민 폰스 엮음, 김희봉, 이홍균 옮김, 당신은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가?, pp. 1~81, 한울아카데미, 2003.

임승빈, 지역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식인의 역할분석에 관한 연구, pp.72~77, 한국시민사회와 지식인, 주성수 편저, 아르케, 2002.